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 벌꿀 가공센터 준공	1
東亞日報	16A	“소양강댐 50년… 수몰민 아픔 잊지 말아야”	2
강원도민일보	23면	도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3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4
누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5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江原日報	03면	“삼척 폐광지에 국제직업고교 설립해야”	7
MBC 강원영동	온라인	"삼척도계전산정보고→강원국제직업고" 요구	8
연합뉴스		조성운 강원도의원 "삼척도계전산정보고→국제직업고 전환...	9
江原日報	10면	‘우여곡절’ 흥천 군인의 날 행사 성료	10
江原日報	07면	“강원임업인 교류 확대·탄소중립 실천 앞장”	11
강원도민일보	06면	SJ가든센터 준공, 도내 정원문화 선도 지역명소 발돋움	12
江原日報	21면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도정설명회	12
강원도민일보	16면	정선 폐광지 창업 활성화 지원 선정 3개 기업 현판식	13
江原日報	15면	폐광지 창업 활성화 … 지역경기 살린다	13
江原日報	09면	“춘천·원주·강릉에 집중된 문화교육시설 도내 전역 확대해...	14
江原日報	21면	“재난 상황 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5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 사회복지계 힘 모아 재난 지원체계 공동 구축"	1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오늘 평창서 기후위기 시대 "오대산 에코포럼"	16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화천군 민박.펜션협회 송년회	17
강원도민일보	17면	화천 민박펜션협 송년회	17
江原日報	04면	강원 의사 수 감소 전국서 두 번째	18
강원도민일보	02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 강특법 개정안 담는다	18
江原日報	04면	'나혼자 산다' 역대 최대 10명 중 4명 60세 이상	19
江原日報	02면	삼척에 국내 최초 수소R&D 실증단지 준공	20
강원도민일보	02면	'지역인재 유출 막는' 교육발전특구 도내 5개 시군 유치전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동해·삼척 '수소 거점도시' 도약 기대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기후위기, 발전 기회로 삼을 전략 필요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역 필수의료 부족,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명분 없다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선거구 획정도 없이 시작된 깜깜이 22대 총선	24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12



강릉 벌꿀 가공센터 준공 강릉 벌꿀 가공센터 준공식이 12일 사천면 노동리 현지에서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을 비롯한 양봉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東亞日報

2023 12 13 ()

/ 16A

“소양강댐 50년... 수물민 아픔 잊지 말아야”

소양강댐의 반세기, 명과 암

경제 발전 초석 다지고 관광 물꼬
마을 수물로 약 2만 명 고향 잃기도

“지역 피해액 10조... 보상 1% 수준”
공동대책위, 지역상생 법제화 추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15일 오후 2시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열린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를 담은 영상과 소양강댐 건설 당시 참여했던 근로자와 주민의 인터뷰 영상이 소개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윤석대 수자공 사장과 자치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양강댐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춘천, 인제, 양구의 50.2㎢가 수몰돼 3153가구, 1만 8546명의 실향민이 생겼고, 통행이 불편해지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픈 기억으로도 남아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15일 준공됐다.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총저수용량 29억 ㎡로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수력발전 등 각 분야에서 50년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연 12억 ㎡의 생활 및 공업용수와 1300만 ㎡의 농업용수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고, 장마철 범람 등의 재해로부터 충실히 수도권을 방호하고 있다.

하지만 수물민들은 낮은 보상비와 흠대 속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인접 지역들은 육지 속의 고도로 전락했다. 양구군은 춘천까지 40분 거리였지만 댐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정상에서 열린 수물민 망향비 제막식. 망향비는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공 50주년을 맞아 건립됐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건설 직후 2시간 반가량 굴곡진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교통 불편과 물류 여건 악화, 기상 변화, 휴탕물 방류로 인한 수질 악화 등 주변 지역의 피해액은 6조 8300억~10조15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상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 의회 의원 8명과 강원도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강원도당을 찾아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를 위한 총선 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소양강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는 등 50년 동안 희생을 감내한 만큼 댐 사용권을 도민

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댐과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 운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20일 소양강댐 정상에서는 수물 지역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망향비 ‘파란 그리움’ 제막식이 있었다. 망향비는 춘천시와 수자공이 2억 원씩 총 4억 원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가로 6m, 세로 3m, 높이 4.8m 크기다. 소양강을 이루는 두 개의 지류를 형상화한 두 기둥 사이에 수몰된 38개 마을을 상징하는 큐브를 설치했다.

김진태 지사는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액은 10조 원에 이르지만 50년 동안 보상은 1000억 원으로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양강댐 건설로 시작된 한강의 기적 뒤에 가려진 수물민들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2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간담회가 12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도의회

도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열고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평창군 모니터 김건모(33)씨가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김 씨는 동네 거주 어르신이 수수료를 받고 대신 택배를 보관해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최유미(주사인앤컴퍼니) 대표가 생활 속 제도개선 필요성 발견 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7월 강원도민 40명을 선정해 입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태윤

2023 12 12 ()

江原日報

강원자치도의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김건무 평창군 의정모니터에 의장 표창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의장:권혁열)는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의정 모니터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갖고 우수 의정 모니터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정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의견을 제출한 김건무 평창군 의정모니터에게 도의장 표창이 전달됐다.

우수 의견으로 선정된 ‘어르신 택배 물품 보관 서비스’는 신선식품 배송지에 사람이 없을 경우 택배를 동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보관해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의정모니터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운영 개선점을 논의했다. 최유미 샤인애플퍼니 대표의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됐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정모니터의 열정과 헌신, 적극적 참여가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 12 12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1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 의정모니터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운영 개선점 논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정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의견을 제출한 평창군 의정모니터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 의견으로 선정된 “어르신 택배 물품 보관 서비스 제안”은 신선식품 배송지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택배를 동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보관해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의정모니터 운영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의정모니터 활동을 촉진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도정 및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도의회와 의정모니터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끝으로 의정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샤인앰컴퍼니 최유미 대표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강연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잘 발견하는 방법, 설득력 높은 제안서 작성법 등을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의정모니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적극적 참여가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3 12 13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7차회의를 갖고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7차회의를 갖고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7차회의를 갖고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7차회의를 갖고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원미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강원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삼척 폐광지에 국제직업고교 설립해야”

도의회 예결특위 7차 회의

국제직업고교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4회 제7차 회의에서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은 “삼척의 석탄공사가 2025년 문을 닫게 되면 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대비책으로 국제직업고교 모델을 강원자치도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구소멸 지역에 우수 외국인 전문직업계고를 신설하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전교생이 27명뿐인 삼척의 도계전산정보고를 강원국제직업고교로 전환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 발견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지영(더민주·비례)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계선 지능 유아들을 조기에 발견,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은 “소액의 사업비를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학교 회계의 불용액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교육청 예산안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이현정기자

2023 12 12 ()

MBC 강원영동

"삼척도계전산정보고→강원국제직업고" 요구

배연환

삼척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조성운 강원도의회원은
제3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모델을
도계전산정보고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은숙 교육국장은
직업계고등학교에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사업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3 12 12 ()



조성운 강원도의원 "삼척도계전산정보고→국제직업고 전환" 요청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의힘 조성운(삼척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은 12일 강원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척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삼척에 있는 석탄공사가 2025년 문을 닫게 되면 지역 소멸이 가속할 것"이라며 "대비책으로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모델을 강원도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소멸 지역에 우수 외국인 전문직업계고를 신설하는 일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재 전교생이 27명뿐인 도계전산정보고를 강원국제직업고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도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onanys@yna.co.kr

39

江原日報

2023 12 13 ()

10

‘우여곡절’ 홍천 군인의 날 행사 성료

행사주체 변경 등 난관 겪어
홍천군 직접 주최·주관 결정
장병·가족 2천여명 화합의 장

【홍천】올해 홍천 군인의 날 행사가 행사주체 변경 등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홍천군은 12일 홍천군국민체육센터와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1사단, 3기갑, 20기갑, 수송교육연대 등의 군장병 및 가족,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해 1부 체육행사와 2부 기념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체육행사는 화합운동회, 군장병 장기자랑, 시상식 등이 열렸으며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또 문화행사로는 장기자랑과 초청가수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와 함께 연평해전의 영웅인 고(故)박



◇홍천군은 12일 홍천군국민체육센터와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혁 병장의 가족을 초청해 홍천군번영회의 성금도 전달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국방TV의 ‘위문열차’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향후 녹화방송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천군의 군인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천군은 2009년 전국 최초로 군인의 날 조례를 제정해 지역 주둔 군부대와 주민들 간 화합의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동

안 홍천군번영회에서 위탁해 개최했었지만 올해 행사는 다양한 이유로 홍천군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등 개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군인의 날 화합한마당은 꼭 필요하다는 지역의 공감대 속에 결국 올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가 군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이 12일 춘천시 사농동에서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 박영선 산림조합 강원지역본부장,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임업인 교류 확대·탄소중립 실천 앞장”

산림조합 강원지역본부 신청사·관상산림식물 종합유통센터 개청식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본부장:박영선)는 12일 춘천시 사농동(춘천시 영서로 2956) 일원에

서 강원지역본부 신청사 및 관상산림식물 종합유통센터(이하 SJ가든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 박영선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육동한 춘천시장,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김동일 강원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도의원, 산림조합장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해 기존 나무시장을 현대화한 시설로 탄생

한 SJ가든센터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제품 소비 확대를 이끌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강원지역 임업인들의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춘천에 조성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호수지방정원과 연계해 강원지역의 정원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SJ가든센터가 앞으로 강원지역 임업인들의 교류 중심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정원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소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06

SJ가든센터 준공, 도내 정원문화 선도 지역명소 발돋움

산림조합 강원지역본부 신청사 개청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영선)는 12일 신청사 및 관상산림 식물 종합유통센터 'SJ가든센터'를 건립하고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춘천 사농동(영서로 2956)에 위치한 SJ가든센터는 총 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해 기존 나무시장을 현대화한 시설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제품 소비확대와 도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영선) 신청사 개청식이 12일 춘천 사농동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산림조합 관계자,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정호

춘천지역에 조성될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호수지방정원을 연계한 도내 정원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본부장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정원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고, 강원 임업인을 위한 교류의 장 역할을 다하겠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3 12 13 ()

21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도정설명회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도정설명회가 12일 강릉 리카이 샌드파인에서 김명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순·심오섭·최재석·유순옥·진종호 도의원을 비롯한 동해안권 9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16



정선군은 12일 사북읍 아리부역·양조에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역재생창업 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정선 폐광지 창업 활성화 지원 선정 3개 기업 현판식

정선군은 12일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창업기업에 대한 현판식을 가졌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북읍의 '아리부역·양조'와 북평면의 '보다공방'·'정선장' 3곳이다. 이날 창업기업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기철 도의원, 최진현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산업과장, 권오광 도경제진흥원장, 황승훈 전략산업과장, 김덕기 가족

행복과장,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3개 창업기업에게는 전문 컨설팅, 유휴공간 리모델링 및 운영비, 선정자 네트워크 형성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을 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신규로 1억원을 지원하고 심사를 통해 연간 500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유주현

2023 12 13 ()

15

江原日報

폐광지 창업 활성화... 지역경기 살린다

【정선】폐광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을 살려낸 기업들의 창업이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선군은 12일 사북읍과 북평면 일원에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 3곳에 대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을 비롯한 최진현 도 자원산업과장, 권오광 도경제진흥원장, 황승훈 군 전략산업과장 등이 참석해 창업기업의 발전을 응원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폐광가나

정선군 사북읍·북평면 창업기업 3곳 현판식
유휴공간 활용 석탄주 등 지역 특색 기업 지원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 3곳에 대한 현판식이 12일 사북읍과 북평면 일원에서 열렸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주민들의 사업 제안을 심사, 선정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창업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북읍 '아리부역·양조'를 비롯해 북평면 '보다공방'과 '정선

장' 등 3개소다.

사북 아리부역·양조의 경우 정선지역 대표적인 여성 창업인인 김민희 디저트 와와 대표 등 2명이 공동 운영하며, 지역의 특색을 스토리텔링한 석탄주와 이색적인 지역 음식들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그 맛이 달고 향기로워 입에 머금고 차마 삼키기 아깝다'는 이름의 전통막걸리 석탄주(惜呑酒)를 재연해 내 맛과 스토리 모든 부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와 군은 창업기업 3개소에 대해 전문 컨설팅은 물론 유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운영비 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매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江原日報

2023 12 13 ()

09

道·강원문화재단·본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문화재단,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3 강원문화 1차 포럼이 지난 11일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열렸다. '강원문화예술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3 강원문화 1차 포럼이 지난 11일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강원문화예술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김남덕기자

“춘천·원주·강릉에 집중된 문화교육시설 도내 전역 확대해야”

/ 종합토론 /

△강승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좌장) “이제는 가르친다는 개념에서 피해 확장하는 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해야 한다.

또 지역 격차를 넘어 지역 특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강원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흩어져 있는 예산이라도 모두 찾아 모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와 행정,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과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관여와 기초의 연계 및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재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장은 “예술인과 일반 대중의 간극을 두고 보면 문화예술교육이 그들만의 전유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따로, 계획 따로, 교육 따로 분절되면서 결과와 효과가 저조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계획은 거창한 데 결과가 초라하면 무엇이 문제

인가 접근성이나 수용성, 시의성 측면을 고민해봐야 한다. 일부 소수에 문화예술교육을 맡기면 매너리즘이 생기고 관성적인 타성에 젖는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해규 강원예총

부회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따라가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문화예술교육 연수가 병행돼야 한다.

춘천을 조금만 벗어나도 문화 소외 지역의 작은 학교가 많다. 교사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진행해 문화예술 확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을 함유할 권리가 당연히 있음에도 할 수 없는 소외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많다. 단순히 그들에게 공연 한 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



강승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정재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이해규 강원예총 부회장



황운기 문화프로덕션 도모 이사장



목선혜 문화예술교육기획자



권현아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강승진 “지역 격차 넘어 지역 특화 어떻게 이룰지 고민”

정재용 “정책 따로, 계획 따로, 교육 따로… 개선 나설때”

이해규 “장애인처럼 소외된 취약계층 위한 지원 필요”

황운기 “비합리적 강사비 등으로 현장 이탈 강사 많아”

목선혜 “문화예술교육 교사에 대한 교육청 관심 절실”

권현아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기존 체계부터 바뀌어”

△황운기 문화프로덕션 도모 이사장은 “비합리적인 강사비, 모호한 진행 주체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

탈한 강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예술가들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문화

예술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의 예술 강사들은 단순히 행정적 어려움을 넘어 기획과 사전 준비에 대한 어려움도 크게 느낀다. 강사비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정산도 유엔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학교로 배움의 공간을 한정하던 시대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넓혀야 한다.”

△목선혜 문화예술교육기획자는 “10년 동안 지원사업을 받아오며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강원자치도는 문화예술을 즐기 참 힘들다’이다.

대백에서 3시간 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 운전을 해야 했다. 크기가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예술교육에 관심

이 있는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중단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김 호흡으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좋겠다.”

△권현아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은 “강원은 18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기초문화재단을 보유하고 있다. 기초단위 거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초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해주시길 바란다.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대내외로 입증해야 할 시기다.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의 예산마저도 지킬 수 없다. 자체 관계자들과 간극 없이 소통하고 성과 지표와 시민의 변화 지표로 전환시켜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바꿔야 한다.”

정리=김민희·김오미기자

“재난 상황 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2023 강원복지포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려

“재난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개입은 필연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도사회복지협의회·도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3 강원복지포럼이 12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형 재난 대응체계와 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난복지’라는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강원 영동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과 함께 연도별 재난 발생 및 피해 증가 추세를 근거로, 재난 상황 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일본의 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더욱 풍성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오피스 소노자키의 대표 소노자키 슈지씨는 “일본 재난복지 실천 체계와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을 주제로, 2018년 이후 정착되고 있는 이재민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군마현 재해복지지원센터의 스즈키 노부아키 센터장은 재해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함께 군마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복지지원네트워크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프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영호)·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중)·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은영)은 12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형 재난 대응체계와 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2023 강원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형미 도사회서비스원 팀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재난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재난 발생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강원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된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의 협력기관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복지의 실행 방안을 하나씩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복지보건의료정책관,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진숙 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박인규 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변영혜 도사회서비스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minimi@

강원도민일보

“강원 사회복지계 힘 모아 재난 지원체계 공동 구축”

2023 12 13 ()

23

도 여가원에서 강원복지포럼 개최
‘재난복지 협력기관’ 현판 전달
이재민 긴급·일상회복 지원 등

대형 산불 등 재난으로 발생하는 강원 지역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계가 강원특별자치도형 복지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중)·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은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영호)는 12일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형 재난 대응체계와 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2023 강원복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을 통해 도내 18개 사회복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도사회서비스원·도사회복지사협회는 12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복지포럼을 열었다.

지기관단체(도사회복지협의회·도사회서비스원·도사회복지사협회·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굿네이버스강원지역본부·다소니·도담쉼터·새롭이네집·속초YMCA·속초시가족센터·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속초종합사회복지

관·월드비전 동해종합사회복지관·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천사의집·해나비지역아동센터·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들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이재민 긴급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강원형 재난복지 협력기관’

이라는 현판을 각각 전달받고 협력을 약속했다.

진영호 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기후위기가 가져온 환경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특히 강원에서 반복되는 대형산불의 경우 사후 회복지원이 필요해 복지계가 지속가능한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엽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재난피해자 회복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연간 가구 소득이 전년보다 약 181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를 잃는 등 피해를 입은 가구는 362곳에 달했다. 포럼에는 일본의 재난분야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참석, 재해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강주영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오늘 평창서 기후위기 시대 "오대산 에코포럼"

본지 주최 지속가능 발전방안 논의

기후위기 시대 도민의 인식 전환을 이끌기 위한 '2023 오대산 에코포럼'이 13일 오후 1시 30분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강원도민일보와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역사문화의 중심 오대산, 환경지식콘텐츠의 진원지로'라는 대주제 아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 저명한 산림학자인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제30대 문화재위원장)가 기조발제를 맡아 '월정사 사찰림의 가치와 보존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 유재심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문화변동'에 대해 분석하고, 이도형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여건 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이 맡은 가운데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지철스님(월정사 사회과장), 남성열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장영환 한국사찰림연구소 경관사업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연계, 친환경 올림픽 성공을 다짐하는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문화제'도 19~22일 평창·강릉·원주·동해에서 이어진다. 김여진

江原日報

2023 12 12 ()

[포토뉴스] 화천군 민박·펜션협회 송년회



2023년 화천군 민박·펜션협회 송년회가 지난 11일 화천여성회관에서 한기호 국회의원, 최문순 군수, 박대현 도의원, 이선희 군의회부의장, 정혜숙 협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17



화천 민박펜션협 송년회 2023년 화천군 민박·펜션협회 송년회가 최근 화천군 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정혜숙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12 13 ()

04

강원 의사 수 감소 전국서 두 번째

최근 4년 사이 의료취약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내 9개 시·군에서 의사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줄어들며 문을 닫는 병·의원이 늘어 인제군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0.58명에 불과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4년 새 시·군·구 의료취약지역 98곳 중 53.1%인 52곳에서 의사 수가 감소했다. 강원자치도는 삼척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등 9개 시·군에서

최근 4년 문 닫는 병·의원 급증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심각
인제군 인구 1천명당 '0.58명'
부산 서구와 무려 68배 차이나

의사 수가 줄며 10곳이 줄어든 경북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의사 수 감소 두 번째를 기록했다.

간호협회는 이 기간 전국적으로 줄어든 의사 수는 270명에 달했으며 간호사들도 취업을 위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연쇄 효과로 인해 지역간 간호사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다고 설

명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의 경우 인제군은 0.58명에 불과해 대형 종합병원이 밀집해 있는 부산 서구(39.45)와 68배나 차이가 났다.

간호협회는 “최근 5년간 전국 58개 의료취약지역인 시·군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간 간호사 수가 최대 438배나 차이나는 등 간호사 인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병원이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호대 학생들의 지역이탈을 심화시켜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우기자 woolee@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02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 강특법 개정안 담는다

도, 교육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

올림픽 시설 국가 소유 전환도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본지 12월 12일자 2면)에 나선 가운데 내국인 면세점 설치와 제2부교육감 도입 등 교육 자치권 확대, 평창올림픽경기장 국가소유 이전 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3차 개정안에는 강원도와 시·군, 도의회, 강원교육청이 발굴한 70여 개 입법과제가 담기는 가운데 이 중에서 내국인 면세점 설치와, 교육 자치조직권 확대, 올림픽 유산 사후활용 특례 등도 눈에 띄고 있다.

교육 자치조직권 확대의 핵심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과 제2부교육감 도입이다. 양양군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관내에

없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속초시와 양양군의 교육업무를 맡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양양군은 인접한 화천군보다 인구가 많고 경찰서가 신설되고 있어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제2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평창올림픽시설의 국가소유권이전 근거를 담은 특례도 추진하기로 해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와 시·군은 평창동계올림픽시설 경기장 유지·관리에 한해 평균 60억원을 쓰고 있다. 해당 특례가 특별법에 담기면 올림픽 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 2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내국인 면세점 설치도 주요 입법과제에 올랐다. 해당 특례는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 12 13 ()

04

‘나혼자 산다’ 역대 최대 10명 중 4명 60세 이상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도내 지난해 25만 가구 넘어
전국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
고령화로 독거노인도 증가세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가구가 25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전체 가구(68만5,000가구) 중 37.2%인 25만4,000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큰 비중으로 전국 평균 34.5%보다 2.7%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38.5%), 서울(3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도내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5.0%, 2021년 36.3%로 나타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의 23.3%가 70세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69세(20.7%), 50~59세(16.8%), 29세 이하(16.7%)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44.0%를 차지한 셈이다. 전국에서 경북(45.7%), 전북(44.7%), 경남(4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1인 가구의 19.2%가 29세 이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층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면서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짙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1인 가구 증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6,762만원)의 44.5%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1.3%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자산은 2억94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2,727만원)의 39.7% 수준이다. 부채도 3,651만원으로 전체 평균(9,186만원)의 39.7%로 나타나는 등 1인 가구의 자산과 부채 모두 가구 평균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40㎡(12.1평) 이하가 50.5%에서 54.6%로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1인 가구는 30.9%에 불과했다. 이규호기자 leekh@

江原日報

2023 12 13 ()

02

삼척에 국내 최초 수소R&D 실증단지 준공

15일 교동서 준공식... 자체 생산 에너지로 생활 가능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한 달간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생활이 가능한 수소 실증단지가 국내 최초로 삼척에 조성됐다.

삼척시는 오는 15일 교동 일원에서 수소 실증단지 준공식을 갖는다. 일반주택 2동, 태양광주택 3동, 수소주택 1동, 외부 거래형 주택 1동 등 9동의 주택과 수소와 태양열, 지열, ESS(전력저장장치) 시설을 갖춘 통합관리동, 커뮤니티동 겸 홍보관이 들어선다.

2020년부터 국비 166억여원 등 299억여원을 들여 추진한 국내 최초의 수소R&D 특화도시 실증단지는

외부에너지 공급 없이 최소 7일에서 1개월 동안 독립운전이 가능하며, 잉여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저장하는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단지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저장합금 및 금속수소화물 압축기를 주거부문에 도입했다. 또 건물 및 주택용 수소전용 연료전지와 복합 열에너지를 연계 활용하는 시스템과 재생전기·열·냉열 생산 및 저장 시스템 등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적용됐다.

이번에 준공된 단지는 시청 핸드볼 선수단 및 창단을 앞두고 있는 공도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수소 타운하우스를 중·대규모 주거타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 휴양단지를 확대 조성해 수소에너지 자립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수소 생산 및 주거 활용, 수소 전주기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신사업 창출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실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거단지 내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거래 방법론 개발로 수소도시 활성화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02

‘지역인재 유출 막는’ 교육발전특구 도내 5개 시군 유치전

춘천·원주·강릉·태백·화천 도전
교육부 내년 3월 1차 선정 발표
시범지 3년 최대 100억원 혜택

속보=정부가 지역인재양성과정주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본지 11월 2일자 3면)를 내년부터 예비지정하는 가운데, 도내 5개 시·군이 특구 유치에 나선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화천군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달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발전특구, 시·군 유치 희망 주요내용

춘천시	초·중·고 역량 강화, 대학·산업 연계
원주시	원주혁신도시 연계 정주환경 개선
강릉시	천연물바이오단지+글로벌대학
태백시	폐광 대체산업 인재 육성
화천군	완성형 돌봄 인프라 및 외국어특화도시

결과는 3월 초 나올 예정이다. 시범지역 2차 신청은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해 7월 말 발표한다. 교육부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지역을 3년간 운영하고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특구 시범지역은 30억~100억원을 받는다. 교육 규제 완화와 특례도 지원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이 함께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체계이다.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도록 이끄는 게 목표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밀접한 교육개혁 사례로 늘봄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등을 꼽았다. 기업과 민간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로 △지역 중심 돌봄·교육 △지역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을 꼽았다.

원주시는 원주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 선정도 내세울 계획이다.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태백시는 시내 고등학교·대학과 협력해 폐광 대체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춘천

시는 지역 6개 대학과 정책협의회를 올해 초 구성했다. 초·중·고 교육역량 강화와 대학·산업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화천군은 완성형 돌봄 인프라 구축, 외국어특화도시 조성,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이주호 장관 주재로 강원지역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각 시·군은 설명회 이후 교육발전특구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 19

동해·삼척 '수소 거점도시' 도약 기대

-클러스터 사업 예타 통과, 기간 산업 육성 박차를

강원특별자치도가 3대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은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동해추암 제2 일반산업단지에서 삼척 호산 LNG인수기지까지 반경 20km 구역을 수소저장·운송 집적단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동해·삼척 지역이 청정 에너지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추동하는 기간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 지자체의 전략적인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비타당성 통과는 동해·삼척 지역이 수소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래, 경제성·정책성 평가 분석 등 기재부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약 2년 만에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439억원, 지방비 423억원, 민자 2315억원 등 총 사업비 3177억원을 투입, 강원도 수소 산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수소 저장·운송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동해시에는 GS 동해전력이 조성한 북평 제2 일반산업단지 31만 4536㎡의 부지에 65개의 수소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1만 4456㎡에 기술역량 강화·기술검증·사업화 촉진·안전성 인증 등을 지원하는 산업진흥센터·안전성 시험센터가 들어섭니다. 또한 수소 형태별 대상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실증테스트베드'가 건립되는 등 수소 저장·운송 관련 집적 공간이 조성됩니다. 삼척시에는 호산항 LNG 생산 기지에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해, 강원권·수도권·중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 수소경제 공급 기반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 중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차 전지에 버금가는 미래 산업으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은 이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관건은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 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 등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3 ()

/ 19

기후위기, 발전 기회로 삼을 전략 필요

- '본보·한은 경제포럼' 특구·관광·농업·생활전분야적응을

기후온난화로 인한 변화가 강원경제와 도민 삶에 끼치는 파장을 놓고 정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경제포럼이 어제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와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12일 지역경제세미나 의제를 '기후변화'에 맞추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 대응 및 농업·관광분야에서의 진행 실태를 짚고 대응 전략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당장 기후변화 대응의 기초자료인 강원지역 기상위험도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가뭄, 홍수, 폭염을 야기하는 기상이변과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문제가 점차 경제지형 및 생활문화를 바꾸고 있으며 향후 더 악화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농업의 경우 생육조건이 달라지고 생산성에 영향을 주면서 작물 주산지가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영농 방식과 경험, 지식으로는 해소가 어려워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농업작물 대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려 해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가 경영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인차원 대응이 어렵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농가소득 변동성은 줄이고 소득 안전망은 강화하는 정책

으로 뒷받침할 것을 주문합니다. 2001년도 도입 후 성장세를 보이는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직불제를 신설해 기후변화 활동을 보완하고 신농업기술 교육 확대를 주장합니다.

또한 여름 일수가 증가하면서 강원주력산업인 관광에서는 백사장 등 해변 관광은 기회를 맞았고 겨울관광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고기온 25도 이상 하루가 늘어날 경우 코로나대유행 이전인 2017년까지 해수욕장 방문객은 6~11%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일 경우 관광객 추이 등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여름관광 방향을 설정하고, 위기의 겨울관광을 보완해야 합니다.

첨단산업 전략에도 태양광·태양열 융복합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천합니다. 생활형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복지' 강화 정책이 필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단위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망 예산 투입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앞장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 특징은 실행 주체가 시민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의 일방통행식 추진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숙지하고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12 13 ()

/ 19

지역 필수의료 부족,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명분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1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에 도는 강원대병원과 도내 5개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 네트워크를 갖추고 파업 실행 시에도 차질 없는 환자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행인 것은 의사협회의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주로 진행되는 데다 도내 중증·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도내 대학병원은 2년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강원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2024년도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지원자가 ‘0’명이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도 모집난이 지속되자 2024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았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사로, 충원하지 못할 경우 입원치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흉부외

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도 미달이 이어졌다. 대동맥과 심장혈관수술 등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 진료를 담당하는 흉부외과는 강원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각각 1명을 모집했으나 마찬가지로 지원자는 ‘0’명이었다. 이처럼 의사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과연 의협의 주장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지역 필수医료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면서 도내 대학병원 공공의료 관계자들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전공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5명(한 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지금도 지방 병원은 수억원대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영입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응급실을 전전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료공백 문제를 풀려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江原日報

2023 12 13 ()

/ 19

선거구 획정도 없이 시작된 깜깜이 22대 총선

내년 4·10 총선이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신호탄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20일간의 총선 일정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날이지만 대한민국 정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으로는 선거 1년 전인 4월 마

무리됐어야 했지만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 이를 지킬 리 없다. 여야가 선거구 확정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7일이였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가 지난 5일 선관

위안을 국회에 내자 이때부터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불리하다며 선관위안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거구를 베풀치기로 확정하는 악습이 재연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여야는 선거구 확정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의를 갖고 시작할 의지가 없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그만큼 지역구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겪고, 유권자는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선거구 획정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획정안을 제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한을 앞당기면 해당 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논의해 지역구를 확정하는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획정위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 국회에 소속된 의원과 정당은 선거구 획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가 선거 직

전까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선거구 획정을 적절한 시점에 완료하려면 획정위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 획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위원을 선임하

12일 예비후보 등록,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

선거제도 오리무중, 여야 정치 후진성 드러내

인구 편차 지키면서도 지역 대표성 살려내야

는 구조이므로 획정위 내부에서도 조기에 합의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기준 이외에 면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인구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거구를 확정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거대선거구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처럼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인구수 대비 면적요인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인구 편차를 지키면서도 지역 대표성이 살아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